

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39/100

#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21학년도 9월 평가원 26~30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국가,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을 ①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드론과 관련된 행정 규제 사항들처럼,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하거나, 개별적 상황을 ②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행정 규제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 기관은 국회에 비해 이러한 사항들을 다루기에 적합하다.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행정입법을 위임명령이라고 한다. 위임명령은 제정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누어진다. 이들은 모두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임명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된다. 위임된 행정 규제 사항의 대강을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③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 규제 사항의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 근거 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넓어진다. 한편,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④ 위임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행정규칙**은 원래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입법으로서 고시(告示), 예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고 위임명령 제정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하여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위임된 사항이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커서 위임명령으로는 ⑤ 대응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이 행정입법의 제정 주체만 지정하고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위임된 사항이 고시나 예규로 제정될 수 있다. 이런 경우의 행정규칙은 위임명령과 달리, 입법예고, 공포 등을 거치지 않고 제정된다.

조례는 지방 의회가 제정하는 행정입법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정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적용된다. 제정 주체가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인 지방 의회라는 점에서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위임명령, 행정규칙과 ⑥ 구별된다. 조례도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야 한다. 또한 법률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지만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 조례는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된다.

## 2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제정 주체가 동일하다.
- ②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개별적 상황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 ③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의 위임에 근거한다.
- ④ 행정 규제 사항에 적용되는 행정입법은 모두 포괄적 위임이 금지되어 있다.
- ⑤ 행정부가 국회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 규제 사항은 행정입법의 대상으로 적합하다.

## 27. ⑦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 위임명령이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 ② 그 위임명령이 포괄적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③ 그 위임명령이 첨단 기술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④ 그 위임명령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권한을 행정 기관에 맡겼기 때문이다.
- ⑤ 그 위임명령이 구체적 상황의 특성을 반영한 융통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8.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요구되지 않는다.
- ②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 ③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명령의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
- ④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의 위임을 받은 제정 주체에 의해 제정된다.
- ⑤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임 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위임명령과 같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①~⑤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갑은 새로 개업한 자신의 가게 홍보를 위해 인근 자연  
공원에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한다. 현수막 설치에 관한 행  
정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 시청에 문의하고 아  
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②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문의하신 규격의  
현수막을 설치하시려면 설치 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 법률 제16조(광고물 실명제)에 의하면, 신고 번호,  
표시 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③ ○○ 시 지방 의회에서 제정한  
법령에 따르셔야 합니다.

- ① ①의 제3조의 내용에서 ④의 제5조의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②의 제5조는 ①의 제16조로부터 제정할 사항의 범위가 정해져  
위임을 받았겠군.
- ③ ③는 ④와 달리 입법예고와 공포 절차를 거쳤겠군.
- ④ ④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와 ⑤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는  
일치하겠군.
- ⑤ ⑤를 준수해야 하는 국민 중에는 ④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이 있겠군.

30. 문맥상 ①~⑤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① : 나타내기
- ② ② : 드러내어
- ③ ③ : 헤아릴
- ④ ④ : 마주하기
- ⑤ ⑤ : 달라진다